의안번호	2207127
의 뢰 인	이정문의원
회 답 일	2025.1.8.
추계번호	24D64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118명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59억 6,400만원(연평균 71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합계	6,916	7,051	7,189	7,331	7,476	35,964	7,1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4조의2 (국회경비대) 신설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둠(제1항)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함(제2항)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함(제3항) 제3항의 경우에 7급 이상의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의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함(제4항) 국회경비대의 조직, 업무 지역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44조의2 (국회경비대)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회경비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신설되는 조직의 구성·운영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신설되는 국회경비대의 조직, 직급별 인력(정원), 업무의 범위는 직제 등 국회규칙에서 정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정원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사무공간 건축비의 경우도 현재 국회경비대(경찰)가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추후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국회경비대의 규모가 확정된 후 그 규모에 따라 신·증축 등의 방식이 정해지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움

○ 자산취득비는 현재 국회경비대에 있는 자산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존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 소요 및 수사활동비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사법경찰관리 공무원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에서 제외함

❑ 현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는 경호기획관(의회경호담당관) 소속 경위, 경호기획관(의회방호담당관) 소속 방호 및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경찰)로 구분됨

[표 2] 현행 국회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 수행 조직 현황

구분	1선	2선	3선	계
신분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경찰)	-
소속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
관련근거	「국회법」 제144조	「국회사무처법」 제2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
담당업무	·회의장 질서유지 ·의전경호 업무	·청사 경비 및 방호 ·주차관리 업무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국회의장 경호 ·국회의장공관 경비	-
정원	67명	134명	118명	319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의 규정 및 현재 국회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 수행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11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건비, 기관부담금과 기본경비를 추계

○ 현재 국회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 수행조직 중 경위와 방호 인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며, 현 국회경비대(경찰) 인력을 대체하는 11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에서는 2024년 국회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의 직급별 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11월)한 공무원임금상승률[1]을 적용하여 산정함

❑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법안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상승률(2024.11.)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인금상승률(%)	1.9	1.9	1.9	1.9	1.9	1.9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등

❑ 신설되는 국회경비대의 증원인력의 직급별 인원은 현 국회경비대(경찰)의 직급별 구성을 고려하여 배분함

[표 3] 국회경비대 증원 인력

(단위: 명)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국회경비대	1	0	11	10	24	72	118

주: 증원인력은 현 국회경비대(경찰) 대체 118명임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인건비 단가) 직급별 인건비 단가는 2024년 국회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경위의 인건비 단가를 참고[2]하여 산정

[표 4] 직급별 인건비 단가: 2024년

(단위: 천원)

직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인건비	101,930	107,138	73,352	61,035	45,754	40,315

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위 5급의 호봉이 높아 5급 인건비 단가가 4급보다 높음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인건비) 증원인력 118명에 대한 인건비는 2024년 인건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표 5] 증원인력 인건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5,732	5,841	5,952	6,065	6,180	29,7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3]을 적용하여 산정함

2) 4급은 기본연봉, 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5급은 1~4급 봉급 및 수당에 시간외수당을 추가하였고, 6~9급은 5급까지의 봉급 및 수당에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명절수당을 추가하였음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기관부담 요율(2024.11.)

[표 6] 증원인력에 대한 기관부담금: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관부담금	749	767	785	806	827	3,9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경찰청 기동대의 총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7.6%를 적용하여 산정함

[표 7] 증원인력에 대한 기본경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경비	436	444	452	461	470	2,2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118명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59억 6,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국회경비대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5,732	5,841	5,952	6,065	6,180	29,768
기관부담금	749	767	785	806	827	3,934
기본경비	436	444	452	461	470	2,262
합계	6,916	7,051	7,189	7,331	7,476	35,96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118명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59억 6,400만원(연평균 71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 기관부담 요율(%)	13.004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표 9]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합계	6,916	7,051	7,189	7,331	7,476	35,964	7,1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현재 국회경비대(경찰) 규모를 고려하여, 신설되는 국회경비대 증원인력 규모를 118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로, 향후 국회경비대 인력규모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